

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

2019. 1. 22.

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
은행연합회 · 금융연구원



목 차



I. 추진배경	1
II.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출금리 운용체계 개선 ..	3
1.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	3
2. 대출금리 산정체계 내부통제 강화	7
3. 합리적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가산금리 항목 조정	8
4. 부당한 금리산정 관련 행정제재 근거 마련	9
III.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도입	11
1. 현황	11
2. 새로운 COFIX 도입방안	12
IV. 기대효과	13
V. 향후 추진계획	14

I. 추진 배경

- ① 은행의 대출금리는 '대출기준금리'에 '가산금리'를 더해 산정
 - * 예) 총대출금리 3.82% = 코픽스 1.82%(대출기준금리) + 2.0%(가산금리)
 - **대출기준금리**(COFIX, 금융채, CD 금리 등)는 개별은행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, **시장전체의 자금조달비용** 등이 반영되어 결정
 - **가산금리**는 **개별은행**이 대출과 관련된 **업무원가, 목표이익률, 우대금리** 등을 고려하여 결정
- ② 그동안 은행의 대출금리가 **합리적이고 투명하게** 산정될 수 있도록 **지속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**
 - 은행 대출 기준금리로 활용되던 CD금리가 거래 감소 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, 은행 자금조달 비용을 가늠할 수 있는 새로운 지수로 **COFIX**(Cost of Funds Index)를 도입('10.2.16)
 - 또한, 대출 기준금리에 가산되는 가산금리 항목이 **자의적이고 불투명하다**는 지적에 따라 **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제정**('12.10.26)
- ③ 대출금리 산정체계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한 결과, **대부분 은행은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정해** 오고 있었으나,
 - 실제 대출과정에서 **지점이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해 부과**하는 경우가 발견되어 **모범규준을 개정해 이를 반영할 필요성** 제기
 - 또한, **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했음에도 은행법령에 구체적인 제재근거가 없는 문제**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 제기

< 금감원 검사 결과 >

- ① 대출심사시 차주의 소득 또는 담보를 누락하거나 과소 입력
- ② 전산시스템에서 나온 금리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, 임의로 최고금리 적용
- ③ 금리인하요구시 가산금리의 다른 항목을 조정해 실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음

* 신용상승에 따른 가산금리 인하($\Delta 0.2$) + 우대금리 축소($\Delta 0.4 \rightarrow \Delta 0.2$) → 금리변동 없음

- ④ COFIX가 은행이 대출을 위해 실제 조달하는 자금의 비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
- ⇒ **지난해 7월부터 금융위는 금감원, 은행연, 금융연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대출금리 산정·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**

참고1

대출금리 모범규준의 주요내용

- 현행 「대출금리 모범규준」에 따라 대부분의 은행권 대출금리는
①대출 기준금리 + ②가산금리 ± ③가감조정금리로 구성

① 기준 금리	②가산금리							③가감조정금리	
	원가	리스크 관리비용				법적 비용	기타		
	업무 원가	리스크 프리미엄	유동성 프리미엄	신용 프리미엄	자본 비용	교육세 출연료 예보로 지준예치금	목표 이익률	부수 거래 감면 금리	본부·영업점 조정금리

- ① **(대출 기준금리)** 대출상품에 따라 **시장금리, 코픽스, 고정금리, 수신금리** 등을 다양하게 활용되며 시장상황에 따라 수시 조정
 - * 은행채 발행 금리 상승, 예금 금리 상승 등의 경우 대출 기준금리 상승
- ② **(가산금리)** 대출 취급시 발생하는 **업무원가, 각종 리스크 관리 비용, 법적비용, 목표이익률**을 반영해 산정
 - * 목표이익률을 제외한 가산항목은 은행 입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며, 사실상 은행의 수익을 결정하는 항목은 목표이익률임
- ③ **(가감조정금리)** 급여이체, 카드이용 실적 등에 따른 **부수거래 감면금리, 영업상황을 감안한 본부·영업점 조정금리**

<가산금리·가감조정금리의 구성항목 세부내용>

신용프리미엄	차주 신용등급, 담보종류, 담보비용, 대출만기, 업종 등에 따라 향후 평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손실 비용		
리스크프리미엄	은행의 조달금리와 대출기준금리(지표금리) 간 차이		
유동성프리미엄	기준금리 변동주기보다 대출 계약만기가 장기인 변동금리 대출에 적용되는 유동성리스크 관리비용		
자본비용	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해야 하는 필요자본의 기회비용		
업무원가	인건비 및 물건비 등을 원가배분 방식을 적용해 산정		
법적비용	신보 등 출연료, 교육세, 예금보험료, 지급준비금 예치금 등		
목표이익률	목표이익 확보를 위해 설정한 수익률		
가감조정 전결금리	부수거래 감면금리	급여통장 유무, 신용카드, 수신 실적 등에 따른 금리감면	
	본부·영업점장 조정금리	-	

Ⅱ.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출금리 운용체계 개선

1.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

가. 「대출금리 산정내역서」 제공: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

- (현황) 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 소비자는 은행으로부터 대출 약정서, 추가약정서, 상품설명서 등을 작성·제공받음

제공서류	대출금리 관련 정보
대출약정서	금리종류(고정·변동), 금리의 구조 및 수준*
추가약정서	* 예) 변동금리 : MOR 기준금리 + 가산금리 1.8%
상품설명서	우대금리의 조건 및 내역
	대출금리 결정요인 및 금리인하요구권 내용

- (문제점) 소비자 입장에서 기존서류 만으로는 대출금리의 구성 및 대출금리 산정시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(예: 소득 등)가 대출금리 산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알기 어려움

* 금감원 검사에서 소득정보 과소 입력(3개은행), 담보 누락(2개은행) 사례 적발

- (개선)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핵심사항(기초정보 + 금리정보)이 포함되도록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작성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토록 의무화

- ① 소득, 담보 등 기초정보를 포함함으로써 소비자는 본인이 제공한 기초정보가 대출심사에 반영되었는지 확인 가능

- ② 금리정보는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준금리, 가산금리, 가감조정금리를 구분하되,

- 가감조정금리는 우대금리와 전결금리를 별도로 구분함으로써 금리 결정의 투명성 제고

* 대출금리 = 기준금리 + 가산금리 + 가감조정금리(우대금리+전결금리)

- ③ 신용도 변화 등의 경우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내용을 명시

- ④ 대출계약의 체결·갱신·연장시, 금리인하요구에 따른 기초정보 변경시,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주기 도래시 내역서 제공

참고2

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예시 (신규대출시)

개 선(대출금리 산정내역서)

[차주 관련 입력정보]

성명	홍길동	고객번호	123-45678
----	-----	------	-----------

구분		입력정보	
대출정보	대출명	직장인 0000 대출	
	대출금액	3천만원	
	상환방법	만기일시상환	
	대출기간	1년	
	신청여부	신규 / 조건변경 / 만기연장	
직장정보	직장명	00상사	
	직위	부장/과장/대리/사원	

	소득정보	연소득	5천만원	기존 대비 추가로 정보 제공
		소득기간	2017년 소득	
	담보정보	담보물건	부동산	
		담보가치	1억원	
	신용정보	신용등급	3등급	

※ 입력정보는 대출상품의 특성(신용/담보 등)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구성

[금리 산출결과]

기준금리				잔액기준 COFIX(1.99%)	
가산금리				2.7%	
가 감 조 정 금 리	우대 금리	신용카드 이용실적	연 0.3%	해당(△0.3%) or 미해당	
		자동차체 실적우대	연 0.1%	해당(△0.1%) or 미해당	
		급여이체 등	연 0.3%	해당(△0.3%) or 미해당	
		예금거래	연 0.1%	해당 or 미해당(0%)	
		전자금융거래	연 0.1%	해당 or 미해당(0%)	
		기타	연 0.2%	해당 or 미해당(0%)	
	전결금리	본부·영업점장 전결금리	전결금리 적용여부 표시	추가	
결정금리				잔액기준 COFIX(1.99%) + 2.0%	

나.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: 대출금리 모범규준 등 개정

- **(현황)** '02년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후 금리인하요구권* 제도를 16년간 시행중(→상품설명서 및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안내)

* 금리인하 요구는 주로 신용도 상승시 영업점의 신용평가시스템(Credit Scoring System) 평가, 본점 승인 등을 거쳐 인정

가계대출	기업대출
· 직장 변동(취업 등 포함) · 연소득 증가(예: 연소득 20% 증가시) · 직장 내 직위 상승시 · CPA 등 은행이 인정하는 전문자격취득 · 은행의 우대고객 등급 부여 등	· 회사채 신용등급의 상승 · 재무상태 개선(감사보고서 등 확인) · 특허권 등의 신규취득 · 추가적인 담보제공 등 신용도 개선

- **(문제점)** 금리인하요구 접수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은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 기록도 잘 관리되지 않음

- 소비자는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수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유에 대해 알 수 없어 소비자 권리행사가 제약

- **(개선)** 금리인하요구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개선

- ①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돼 신용도가 개선되면, 신용개선 효과 만큼 가산금리가 인하되도록 함

* 신용도 상승에 따라 가산금리가 하락해야 하나, 다른 가산금리 항목을 상승 시킴으로써 가산금리가 인하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방지

- ② 금리인하요구 처리결과는 반드시 통보토록 하고, 통보시에는 구체적 사유도 함께 통보

* (예시) 직장 내 직위가 상승했지만, 연봉 상승이 없으므로 신용도가 상승하지 않아 금리인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

- ③ 금리인하요구와 관련해 은행이 업무처리기준·절차를 마련하고 접수·처리내역을 기록·보관토록 규정

- ④ 다만, 현행 모범규준에 규정된 필수 금리인하사유중 전문자격증·특허 취득* 등은 은행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

* 일부 은행에서는 전문자격증·특허 취득 등은 잠재적인 소득·수익 상승 요인으로 보아 이를 신용개선 요인으로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

다. 대출금리 비교공시제도 개선: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

- **(현황)** 은행연합회는 은행이 1달간 취급한 대출의 가중평균 금리 비교공시

<대출금리 비교공시 예시(분할상환 주담대)>

은행	구분	신용등급별 금리					평균
		1~2	3~4	5~6	7~8	9~10	
A은행	대출금리	3.41	3.50	3.62	3.70	-	3.52
	기준금리	1.80	1.81	1.84	1.81	-	1.82
	가산금리	1.61	1.69	1.78	1.89	-	1.70
	CB사등급	1.6	2.4	3.9	4.2	-	2.8

- **(문제점)** 비교공시되는 가산금리에 가·감조정금리까지 포함되어 가산금리에 대한 착시효과 발생

- **(개선)** 가·감조정금리(우대금리+전결금리)를 가산금리와 구분하여 별도항목으로 공시

현행				개선			
구분	신용등급별 금리		평균	구분	신용등급별 금리		평균
	1~2	(생략)			1~2	(생략)	
대출금리(A+B)	3.41	...	3.52	대출금리(A+B+C)	3.41	...	3.52
기준금리(A)	1.80	...	1.82	기준금리(A)	1.80	...	1.82
가산금리(B)	1.61	...	1.70	가산금리(B)	1.88	...	2.03
CB사 등급	1.6	...	2.8	가감조정금리(C)	△0.27	...	△0.33
				CB사 등급	1.6	...	2.8

2. 대출금리 산정체계 내부통제 강화 : 대출금리 모범기준 개정

가. 차주가 제공한 기초정보 등에 근거한 대출금리 산정

- ☐ (현황) 소득·담보는 대출금리와 한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나,
 - 은행이 고객의 소득, 담보 등을 과소입력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 → 대출금리는 높아지고 한도는 축소
- * 금감원 검사에서 소득정보 과소 입력(3개은행), 담보 누락(2개은행) 사례 적발
- ☐ (개선) 대출금리는 차주로부터 제공·확인받거나 신용정보시스템 등에서 조회한 기초정보에 근거하여 산출하도록 명확히 규정

나. 대출금리 임의변경시 내부승인절차 신설

- ☐ (현황) 중도금대출 등 은행이 별도 책정한 금리를 적용하는 대출 이외의 대출의 경우, 여신심사시스템에서 대출금리와 한도가 결정되고 이를 기반으로 가감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를 산정해야 하나,
 -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를 합리적 근거 없이 임의로 조정해 높은 금리를 부과한 경우도 있음
- * 기업대출시 체계적으로 산출된 금리가 아닌 최고금리 적용(2개은행) 사례 적발
- ☐ (개선) 대출 과정에서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 내부승인을 받도록 의무화

다. 금리산정체계 운영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/변경

- ☐ (현황) 일선 점포에서 부당한 금리산정 관행을 지속하더라도 이에 대한 점검이 없어 동일한 행위가 계속 반복될 가능성
- ☐ (개선) 은행이 주기적으로 일선 점포의 대출금리 산정업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·관리하도록 함
- * 이와 함께 유동성 및 리스크 프리미엄 등 가산금리 항목들도 그 특성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산정 및 점검

3. 합리적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가산금리 항목 조정 : 대출금리 모범기준 개정

가. 가산금리 구성항목 주기적 재산정

- ☐ (현황) 가산금리는 ①시장상황에 따라 적시에 조정해야 하는 항목과, ②시장상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간접비 항목으로 구분
- * ① 유동성프리미엄, 리스크프리미엄(조달금리-기준금리)
② 업무원가, 법적비용, 마진(목표이익률), 자본비용
- ☐ (문제점) 현행 모범기준상 유동성프리미엄과 리스크프리미엄은 시장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적시에 반영하도록 규정
- “적시에 반영”하는 시점이 없어, 소비자에게 유불리하거나 은행의 리스크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음
- ☐ (개선) 가산금리 구성항목의 수치를 주기적으로 재산정
- 유동성·리스크프리미엄은 원칙적으로 월 1회 이상 재산정하되, 필요한 경우 보다 완화된 주기로 재산정할 수 있도록 함
- 간접비 항목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되,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재산정할 수 있도록 함

나. 유동성 프리미엄 정의규정 개선

- ☐ (현황) 은행은 대출재원의 자금재조달 관련 불확실성을 유동성프리미엄으로 산정해 가산금리에 부과해 오고 있음
- ☐ (문제점) 고정금리 대출도 유동성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나, 모범기준은 변동금리만 유동성프리미엄을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
- ☐ (개선) 변동금리 및 고정금리 대출 모두 유동성프리미엄을 가산할 수 있도록 정의 변경

4. 부당한 금리산정 관련 행정제재 근거 마련

- **(현황)** 현행 은행법령 체계내에서는 대출금리 부당산정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 조치를 부과하기 곤란
 - 은행법령(법§52의2, 시행령§24의4)에서 금지되는 불공정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나, 대출금리 부당산정 행위는 불포함
- **(문제점)** 은행의 내규(내부통제기준) 위반이나 은행법상 임직원에 대한 일반 조치근거 조항*을 들어 제재 조치하기는 어려움
 - * 은행법 §54 은행의 임직원이 ①은행법 또는 은행법에 따른 규정·명령·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②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제재조치 가능
- 은행 내규 위반으로 조치할 경우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고, 개별적인 근거 없이 일반조항에 근거하여 조치하기도 어려움
- **(개선)** 현재 발의된 의원입법안의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되, 은행법 시행령 개정 우선 추진

* 예 :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고의로 반영하지 않는 행위 등을 불공정 영업 행위에 포함

◇ 대출금리 부당산정과 관련한 「은행법 개정안」 발의 현황

- ① **민병두의원안**(‘18.7.2) : 은행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등에게 부당하게 금리를 부과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“불공정 영업행위”로 추가하여 금지
 - ② **김관영의원안**(‘18.7.3) : 은행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등에게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행위를 “불공정 영업행위”로 추가하여 금지
 - ③ **김중회의원안**(‘18.9.3) :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이자율을 결정하는 등 차주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“불공정 영업행위”로 추가하여 금지
- ※ 위반시 은행에 건당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은행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조치 가능

별첨 중도상환수수료 개선방안

- **(현황)** 은행은 대출 후 3년 내 상환이 발생하면 상환액의 1.0%내외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
 - 잔여일수 체감방식(sliding)*을 적용하여 잔여일수가 짧을수록 (=대출후 경과기간이 길수록) 수수료율은 체감
 - * [예시] (대출직후 상환) 1.5% → (1년후 상환) 1.0% → (2년후) 0.5% → (3년후) 0%
-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의 조기상환으로 발생하는 “대출관련 행정비용”과 “이자손실”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

- ① **(대출비용)** 인지세·등록세·법무사비용·감정평가수수료 등
 - 대출비용은 은행이 지불한 후 대출기간 동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할 예정이었으나, 조기상환될 경우 비용보전 필요
- ② **(이자손실)** 대출시점 대비 금리가 낮아져 중도상환금을 다른 대출로 재운용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금전적 손실

- **(문제점)** 중도상환시 이자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변동금리 대출에도 고정금리대출과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
- **(개선)** 이자손실 리스크가 크지 않은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
 - * 평균적으로 담보대출의 경우 0.2~0.3%p, 신용대출의 경우 0.1~0.2%p 인하 예상
 - 다만, 구체적 인하수준은 각 은행이 자사의 대출종류별 이자손실 등을 추계하여 개별적으로 결정
- **(시행)**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감안해 ‘19.4월부터 시행
 - 신규 대출자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자 모두 적용

Ⅲ.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도입

1. 현 황

- 은행권은 자금조달비용을 고려하여 시장금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대출 기준금리 지표로 COFIX를 도입
 - COFIX는 8개 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8개 대상상품* 자금의 평균비용을 가중 평균해 발표하고 있으며,
 - * 시중 8개 은행의 정기 예·적금, 상호부금, 주택부금, CD, RP, 표지어음매출, 금융채
 - 요구불 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(이하 “결제성 자금”)은 단기 자금 특성상 대출재원으로 활용하기 어렵고 거액 입출금시 금리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어 COFIX 산정시 제외
- COFIX는 도입 이후 변동금리 가계대출의 주요 기준금리로 활용

< 8개 은행 원화대출 구성 >

단위 : 조원, (%)

총대출 (1,177조)									
구분		변동	COFIX	잔액기준	금융채	CD금리	KORIBOR	기타	고정
가계대출 (603조)	주택담보 (313조)	179.5	113.3 (63.1)	32.3 (28.5)	47.7 (26.6)	10.9 (6.1)	4.0 (2.2)	3.6 (2.0)	133.7
	신용 및 기타 (290조)	230.4	130.1 (56.5)	26.9 (20.7)	59.8 (25.9)	27.7 (12.0)	8.9 (3.9)	3.9 (1.7)	59.2
합계		409.9	243.4 (59.4)	59.2 (24.3)	107.5 (26.2)	38.6 (9.4)	12.9 (3.2)	7.5 (1.8)	192.9
기업대출 (574조)		372.9	6.8 (1.8)	3.2 (47.1)	107.4 (28.8)	122.5 (32.9)	104.0 (27.9)	32.2 (8.6)	200.9

* 잔액기준 : 해당 COFIX 대출 중 잔액기준COFIX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(%)

2. 새로운 COFIX 도입방안

- 은행은 COFIX 대상상품 뿐만 아니라 결제성자금, 중기 대출을 위한 정부 및 한은 차입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출재원을 조달
 - 따라서 은행이 실제 대출재원으로 사용하는 자금을 최대한 포함해 자금조달비용 지표를 산정할 필요

- 결제성자금 및 기타예수/차입부채를 포함한 잔액기준 COFIX를 신규 도입

- 결제성자금의 경우 전체 대출재원의 18.6% 비중 활용중
 - * 결제성자금 전체규모(541조원) 대비로는 43% 수준에 해당
- 기타예수/차입부채는 전체 대출재원의 15.2% 비중 활용중
 - * 기타예수/차입부채는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등 특정목적에 위해 정부, 한은, 지자체에서 조달한 자금, 은행간 정기예금 등

대출 (1,177조원)	=	1. COFIX 대상 8개 자금	778조원(66.2%)
		2. 기타예수/차입부채	179조원(15.2%)
		3. 결제성자금	219조원(18.6%)

- 결제성자금과 기타예수/차입부채를 포함하여 산정할 경우 잔액 기준 COFIX는 현행보다 27bp 정도 하락
 - COFIX에 대출재원으로 쓰이는 일부 결제성자금을 포함 하더라도 새로운 COFIX의 변동폭은 안정적
 - * 결제성자금 포함시 현행 COFIX보다 표준편차 감소(10.1→8.7bp, '16.8~'18.8월 기준)
- 새로운 잔액기준 COFIX는 시스템 구축 → 시범운용 및 검증을 거쳐 '19.7월부터 시행하고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
 - 기존 잔액기준 COFIX :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, 기존 대출계약자를 위해 새로운 COFIX와 병행해 산출·공시
- 기존 잔액기준 COFIX 대출을 받은 경우 3년이 경과하면 중도 상환수수료 없이 새로운 잔액 COFIX로 전환이 가능하며,
 - 변동금리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*되면 대출계약 후 3년 이전 이라도 좀 더 쉽게 대출 전환 가능
 - * 변동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는 신규대출자 뿐만 아니라 기존대출자에게도 적용
- ※ 신규취급액 기준 COFIX에 결제성자금을 포함할 경우 COFIX가 크게 인상·인하되는 등 변동폭이 확대되어 기준금리 지표의 중요한 목표인 신뢰성과 안정성을 상실* ➡ 현행 유지

* 前月규모 대비 2배 이상 순유출 ~ 3배 이상 순유입되어 지수 변동성이 큼
 ** 한은도“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” 상의 신규취급액 기준 수신금리에서 결제성자금 제외

IV. 기대 효과

- ① 대출 관련 중요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
- 금리산정 내역서에 기초정보와 금리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보여 줌으로써 금리수준 등 본인의 대출결정과 관련된 상세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음
 - 비교공시를 현행보다 세분화함으로써 소비자가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대출금리 수준에 대한 비교 등을 통해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유도할 수 있음
- ②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리행사 강화
-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시 신용개선에 따른 하락분 만큼 가산 금리가 인하되도록 함으로써,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함
 - 금리인하를 거부한 경우에는 왜 거부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 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강화
- ③ 대출금리 산정방식 합리화
-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의 하나인 COFIX와 가산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함으로써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·부과가 이해 가능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
- ④ 변동금리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로 은행 간 금리경쟁 유도
- 변동금리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를 통해 대출상품으로 보다 쉽게 갈아탈 수 있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해 금리경쟁 유도

V. 향후 추진계획

- ☐ 모범규준 개정은 1분기중 마무리
- ☐ 은행법 시행령, 감독규정 시행세칙은 상반기중 마무리
- ☐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는 4월부터 시행
- ☐ 새로운 잔액기준 COFIX는 상반기중 시스템 개편, 시범운영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

<과제별 추진 일정>

과제명	조치사항	일정 · 소관	
1. 대출금리 운용체계 개선			
가.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	▶ 표준 대출금리산정내역서 서식	19.1분기	금감원
	▶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	19.1분기	은행연
나. 금리인하요구권 개선	▶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	19.1분기	은행연
다. 대출금리 비교공시 제도 개선	▶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	19.상반기	금감원
	▶ 대출금리 비교공시시스템 개선	19.상반기	은행연
	▶ 중도상환수수료 인하	19.4월	각 은행
라. 은행법령상 부당 금리 산출에 대한 조치근거	▶ 은행법 시행령 개정	19.상반기	금융위
2.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도입			
가.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도입	▶ COFIX 관리규정 개정	19.상반기	은행연
	▶ COFIX 산출시스템 개편	19.상반기	은행연

참고3

금감원 검사결과^{18.6.22일} 나타난 문제점 개선방안

비고	금감원 점검결과 지적사항(6.22일)	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방안
검 사 시 지 적 사 항	① 대출심사시 소득 및 담보 누락 ○ 연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이 없거나 소득보다 작다고 입력 ○ 고객이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이를 없다고 입력	① 대출심사시 핵심정보인 소득, 담보 등 기초정보의 변경 금지 ○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 소득, 담보 여부를 명시
	② 전산으로 산출된 금리가 아닌 은행의 최고금리를 임의 적용	② 신용평가모형에서 산출된 금리 변경 금지 ○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 내부승인을 받도록 함
	③ 가산금리 항목 산정·부과 ○ 경제상황을 감안해 적시에 조정해야 할 항목 [*] 이 있음에도 수년간 이를 조정하지 않음 * 신용프리미엄 : 경기변동 등을 반영한 예상부도율, 부도시 손실율 등을 감안해 산정해야 함	③ 가산금리 항목 재산정 주기 명시 및 주기적 점검 ○ 신용프리미엄 등 시장상황을 반영해야 하는 항목은 월 1회 이상 재산정 등 * 금리 산정체계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
	④ 차주의 금리인하요구에 따른 금리인하시 우대금리를 축소	④ 금리인하요구에 따른 인하시 신용개선 효과만큼 인하 규정
	⑤ 대출금리 비교공시(은행연)시 우대금리 적용 후 대출금리 공시	⑤ 대출금리 비교공시시 가감조정 금리(우대금리 포함) 별도 공시
제재 근거 미비	<input type="checkbox"/> 부당한 금리부과시 별도의 제재근거가 불명확	<input type="checkbox"/>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제재근거 마련
소 비 자 보 호	<input type="checkbox"/> 금리인하 요구 요건 [*] 에 해당됨에도 금리인하를 거절할 때 이유를 통보하지 않음 * 직장변동, 연소득 증가, 직장내 직위 상승시 등	<input type="checkbox"/>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그 이유를 고객에게 설명 * (예시) 이직해 승진했지만 연봉이 직전 직장과 동일해 금리인하가 되지 않음